

2018, 국가직 7급 행정학(㉠책형)

총 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국가직 7급 행정학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문제보다는 수업시간에 늘 강조해 왔던 주제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방식에 있어서 ‘세부적인 법령’이나 ‘과거의 기출지문과는 다른 방식의 표현’들이 있어서 이해중심의 학습보다는 기출지문의 단순 암기식 학습을 해왔던 수험생들이나 자세하고 세밀한 학습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출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요약 강의나 기출지문 암기식 공부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이해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문제풀이 과정에서 각각의 지문들을 낱알이 뜯어보고 명확하게 학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하이패스 행정학 수업’이나 ‘행정학의 핵 수업’에서 늘 학습해왔던 방식인 각각의 지문에 대한 O, X 확인 학습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방식입니다.

출제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 5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19번]「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이패스 행정학 심화강의에서 자세하게 정리한 법률내용들이며, 자주 출제되는 법률들이니 법률내용에 대한 정확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또 [문제 16번] 지방채에 대한 문제와 [문제 18번] 정부간 관계에 대한 문제 역시 다소 난이도 높은 문제였습니다. 이들 문제들 역시 하이패스 행정학 심화강의에서 강조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정리가 아직 안된 수험생들은 해설에 정리된 내용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늘 당부 드리지만 지난 시험의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올해 치러진 시험의 기출문제를 학습하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2018. 8. 18 하이패스 행정학 이명훈 -

0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 ②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 ③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정답 ② 행태적 접근방법은 행정학 연구의 과학화를 위해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사실만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하이패스 행정학 p70

핵심체크 행태적 접근방법

의의	조직 내부의 인간행태를 경험적·실증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접근방법
대두배경	- 원리주의적 접근 비판 : 제시된 '원리'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못했음을 비판 - 구제도론적 접근 비판 : 제도 내의 인간행태의 중요성을 간과하였음을 비판
행정개념	행정이란 사실에 관한 집단적(협동적) 의사결정과정
연구범위	가치중립적 연구 :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 중심의 연구
연구대상	- 행태 : 관찰·질문·면접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외면화·표면화된 가치관·사고·태도 - 집단행태와 문화 중시
연구방법	- 자연과학(순수과학)적 연구(논리실증주의) - 조작적 정의를 통한 계량적 분석 및 확률적 설명
접근방법	- 미시적 접근(방법론적 개체주의, 환원주의적 시각) -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의 조화 - 범학문적(통합적) 성격(심리학, 사회학 등과 통합) - 사회심리학적 접근 : 인간을 감정, 신념, 인격을 지닌 존재로 인식
행정관점	종합적 관점(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절충 - 행정인, 제한된 합리성 등)

0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 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모스카(Mosca)의 지배계급론이나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 등은 유럽에서 주장된 고전적 엘리트이론이며,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은 미국에서 주장된 고전적 엘리트이론이다. 신엘리트이론은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가 달(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고 제기하였다 **☞ 하이패스 행정학 p263**

핵심체크 신엘리트이론(무의사결정론)

의의	지배 엘리트(기득권 세력)의 특권·이익·가치관·신념 등에 대한 잠재적·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기 위해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반하는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억압하는 결정(Bachrach와 Baratz의 「권력의 두 얼굴」)	
등장 배경	• 다알(Dahl)의 다원론에 대한 비판 : 다알(Dahl)은 권력의 밝은 측면만 인식했다고 비판 • 1960년대 흑인폭동	
특징	• 결정자의 무능력이나 무관심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결정자의 의도적 행위 • 정책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서 발생 • 정책문제의 잘못된 인지로 인한 제3종 오류 야기 •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엘리트가 아닌 특수이익집단에 의한 무의사결정 발생	
발생 원인	① 불리한 사태의 방지, ② 과잉충성, ③ 관료이익과 상충, ④ 지배적 가치의 부정, ⑤ 편견적 정치체제에 의한 부정 등	
수단	폭력의 행사	테러, 구타, 암살 등(가장 직접적인 수단)
	권력의 행사	기존 혜택의 박탈에 대한 위협, 새로운 혜택을 통한 유혹, 적응적 흡수 등
	편견의 동원	정치체제 내의 왜곡된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 강조
	편견의 수정·강화	기존의 규범이나 절차의 수정·보완(가장 간접적인 방법)
	기타	결정이나 집행의 지연 및 방지, 상징에 그치는 정책대안 채택, 위장합의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ㄴ. 공정거래위원회
 ㄷ. 특허청 ㄹ. 국가기록원
 ㄴ. 국립중앙박물관 바. 문화재청

- ① $\neg$, 日 ② $\perp$, 己
③ $\sqsubset$, 口 ④ $\exists$, 口

정답 ④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 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ㄴ), 특허청(ㄷ), 문화재청(ㄹ)은 18부 5처 17청 6위원회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ㄱ)과 국가기록원(ㄷ)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449

핵심체크 정부조직의 구성

개념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조직		
구성	중앙행정기관	의의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관(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함)
		유형	- 부(部) : 소관사무의 결정과 집행을 모두 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18부) - 처(處) :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부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막료부처(5처) - 청(廳) : 각 부의 집행기능 중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행정기관(17청)
			- 대통령 소속 : 방송통신위 - 국무총리 소속 : 금융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 독립 위원회 : 국가인권위
	조직 내부기관	최고관리층	단독제 중앙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장관·처장·청장 등)
		하부조직	- 보조기관(계선) : 차관·차장·실장·국장·과장 등 - 보좌기관(막료) : 차관보·담당관 등
		소속기관	- 부속기관 : 교육훈련기관, 자문기관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 지방의 일선기관

0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 ②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 ③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 ④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정답 ③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의 지속적인 교호작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하이패스 행정학 p303

오답정리

- ①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 ② 회사모형은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 ④ 사이버네틱스모형은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핵심체크

혼합주사모형

의의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탈피하여 양자의 장점을 절충하고자 하는 전략적 모형 - 정책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지속적인 교호작용을 통한 의사결정을 중시	
특징	근본적(맥락적)결정 - 합리적 결정	- 대안탐색 :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모두 고려(합리모형) - 결과예측 : 중요한 결과만 개괄적 예측, 미세한 세목 무시(합리모형의 한계 극복)
	세부적(지엽적)결정 - 점증적 결정	- 대안탐색 : 근본적 결정 내에서 소수의 대안만 고려(점증모형) - 결과예측 : 각 대안의 세부적 분석(점증모형의 한계 극복)
	정치체제와 모형과의 관계	합리모형은 전체주의 체제에, 점증모형은 민주주의 체제에, 혼합주사모형은 범사회적 지도체제의 틀을 갖춘 능동적 사회 또는 자기유도적 사회에 적용
장점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정책결정 가능	
단점	- 이론적 독자성 결여(거시적 결정과 미시적 결정의 결합에 불과) - 현실적으로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간의 구분 곤란	

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하이패스 행정학 p457**

핵심체크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과 지정할 수 없는 기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은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	①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06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준실험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험으로 내적타당성은 낮으나, 자연상태에서의 실험으로 호손효과가 방지되어 외적타당성은 높다. **하이패스 행정학 p350**

오답정리

-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해당한다.
-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호손효과라 하며, 호손효과는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 ④ 내적타당성은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론의 정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내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체크 실험평가(진실험, 준실험)와 비실험평가(비실험)

진실험	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하는 사회실험	
	변수통제	무작위배정에 의한 통제	
	장단점	허위변수나 혼란변수가 통제되어 내적 타당성은 높으나, 인위적 환경에서의 실험으로 호손효과를 강화하여 외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은 낮음	
준실험	의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회실험	
	변수통제	측조에 의한 통제 - 매칭(짝짓기)에 의한 배정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구분될 때 :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설계(유자격자 중 정책혜택을 받는 집단[실험집단]과 정책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정책효과 추정)
		계귀적 통제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구분되지 않을 때 : 분절적(단절적) 시계열 분석, 분절적 시계열 비교집단설계
	장단점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은 낮으나, 자연상태의 실험으로 호손효과가 방지되어 외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은 높음	
비실험	의의	통제집단을 구성하지 않고 실험집단에만 정책을 처리하여 정책효과를 추론하는 방법(김중이 아닌 인과관계 추론방법)	
	실험방법	단일집단 사전·사후 측정연구 등	
	변수통제	통계적 통제	시계열 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한 효과 추정
		포괄적 통제	기대되는 규범에 따라 효과 추정
		잠재적 통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효과 추정
	장단점	내적 타당성은 극도로 낮으나 자연상태의 실험으로 외적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은 높음	

0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 ③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 ④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답 ④ 정책혁신은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정부지출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335

핵심체크 정책변동

개념	정책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지식을 환류시켜 정책의 내용과 집행방법을 변화시키는 것		
원인	• 정책환경의 변화(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의 변화, 정책에 대한 지식·기술의 변화, 정당·이익집단 등 참여집단의 역학관계 변화 등) • 정책의 오류와 집행조직의 약점 • 정책추진자에 대한 불신과 정책관련집단의 저항		
유형	정책혁신	기존 정책을 대부분 바꾸어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는 것(정책결정과 유사 - 새로운 조직 탄생, 새로운 법률 제정, 새로운 정부지출)	
	정책승계	의의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기존조직 개편, 법률개정, 기존 예산 존재)
		유형	① 정책대체(선형대체 : 정책목표를 유지하면서 정책내용을 새롭게 바꾸는 것), ② 정책분할, ③ 정책통합, ④ 부분종결, ⑤ 복합적 정책승계, ⑥ 파생적 승계(우발적 승계) 등
	정책유지	• 현존하는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정책내용을 변화시키는 것(기존 조직, 기존 법률, 미미한 예산변동) • 주로 정책의 산출변화를 야기(정책대상집단의 범위 변동, 정책의 수혜수준의 변화 등)	
	정책종결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기존 조직 폐지, 관련 법률 폐지, 모든 예산 소멸)	

0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정답 ① ㄱ은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을, ㄴ은 해크만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을, ㄷ은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을, ㄹ은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을, ㅁ은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을 의미한다. 이 중 브룸(Vroom)의 기대이론(ㄱ), 해크만과 올드햄(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ㄴ),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ㄷ)은 과정이론에 속하며,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ㄹ)과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ㅁ)은 내용이론에 속한다. **하 이패스 행정학 p492~504**

0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정답 ② 기준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하이패스 행정학 p583

핵심체크 시험의 타당도

기준 타당 도	의의	•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기준 • 시험성적과 근무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 타당성이 높음		
	검증 방법	예측적 타당성 검증	의의	시험합격자가 일정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평가	측정의 정확성은 높으나, 비용과 노력이 과다하게 소모되며, 시차가 존재하여 성장효과 및 오염효과 야기
		현재적 타당성 검증	의의	현재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한 다음 재직자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한계			신속하고 비용과 노력이 절감되나, 측정의 정확성이 낮음	
내용 타당 도	의의	시험이 특정한 직위에 필요한(직결되는) 실질적인 능력요소를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는가에 관한 기준		
	검증 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요구되는) 능력요소와 시험내용의 비교 • 직무에 정통한 전문가집단에 의한 평가(관련 전문가들이 패널 구성 등) • 직무분석을 통해 선행적으로 실질적 능력요소를 파악해야 함		
구성 타당 도	의의	시험이 이론적(추상적) 능력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관한 기준		
	검증 방법	수렴적타당성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상관관계가 높을수록 타당성 높음)	
		차별적타당성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타당성 높음)	
	평가	•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개발과 고도의 계량분석기법 및 행태과학적 조사가 필수적 • 직무내용의 능력요소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고위직에 유용하지만, 고도의 관념적 추론과정을 거치므로 오류 가능성이 큼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정답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당국이 총정원과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관리하고, 각 기관은 동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인력규모(정원규모)·인력종류(직급·직렬)·기구설치·인건비 배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620

핵심체크 총액인건비제도

구분	표준정원제	총액인건비제도
정원규모	• 정원 1인 증감에도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 • 상한범위 내 실제 정원규모는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정원의 3% 이내에서 추가 운영 가능)
계급별 정원	•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	• 부처 자율 결정(상위직만 한도 설정)
기구 설치	• 국 단위 이상 기구는 직제(대통령령)로 규정 • 과 단위 기구 총수 통제	• 국 단위 이상 기구는 직제로 규정(현행 유지) • 과 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 설치(총수 통제 폐지)
인건비 배분	인건비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고 기본항목은 행정안전부가 종합관리하는 반면, 성과상여금 등 자율항목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	

11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 ②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 ③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정답 ① 의존재원은 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의존재원 중 특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재원의 용도를 지정해주는 특정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를 저해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818

핵심체크 의존재원

개념	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	
기능	① 가치재의 급부 수준 향상 기능, ② 국가적 최저 표준 수준의 기본적 공공서비스 제공 기능, ③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균형 시정 기능, ④ 건설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립 기반 확충 기능, ⑤ 지방재정지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기능, ⑥ 행정효율성 향상 기능, ⑦ 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등	
유형	수직적 재정조정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
	수평적 재정조정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제도
	특정지원금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조건부 보조금)
	일반지원금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보조금(비조건부 보조금)
	포괄지원금	보조금의 총량을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재원을 교부하는 보조금(일반지원금과 특정지원금의 중간적 성격 - 우리나라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대응지원금	상위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특별한 대응재원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지원금(상위정부가 선호)
	무대응지원금	상위정부의 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특별한 대응재원을 마련할 의무가 없는 지원금(하위정부가 선호)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 ① $\neg$, $\exists$
② $\neg$, $\forall$
③ $\forall$, $\square$
④ $\exists$, $\Diamond$

정답 ④ 종합부동산세(ㄷ), 인지세(ㄹ), 주세(ㅂ)는 국세에 해당하며, 취득세(ㄱ), 자동차세(ㄴ), 등록면허세(ㅇ)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652

핵심체크 국세의 유형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2019년 폐지)	
관세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면 발생하는 세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정답 ③ 「국가재정법」상 정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법」상 지방예산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672

핵심체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구분	국가재정	지방재정
예산제출시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광역 : 50일 전, 기초 : 40일 전
예산의결시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광역 : 15일 전, 기초 : 10일 전
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
통합재정	정부통합재정통계 작성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특별회계	법률로 설치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운영, 특별회계일몰제 도입)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제한 있음	편성사유 제한 없음
편성과정에서의 주민(국민)참여	국민참여예산제 도입(2018)	주민참여예산제 도입(2011, 필수사항)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주민(국민)감시	예산성과금제 도입	예산성과금제 도입
성인지 예·결산제도	시행(2010년)	시행(2013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제출	실 시	실 시
조세지출예산서	실시(조세지출예산서)	실시(지방세지출예산서)
총액계상예산	도 입	미도입
발생주의·복식부기	실 시	실 시
납세자소송제도	미도입	도 입
예비비 반영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계상할 수 있음(임의사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100 범위 내로 계상해야 함(필수사항)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 ② 칼도- Hicks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④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정답 ② 칼도- Hicks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사회의 총효용이 총손실보다 크다면 능률적이라고 판단하는 능률성 평가기준으로 형평성 평가기준인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341

핵심체크 **능률성평가기준**

파레토 효율 기준	특정정책의 시행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가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익을 보는 자가 있다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대안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준
칼도(Kaldor) - Hicks(Hicks)의 기준	- 특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한 총효용이 총손실 보다 크다면 늘어난 효용으로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대안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준 - 지나치게 엄격한 파레토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비용편익분석의 순현재가치(NPV)와 유사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하이패스 행정학 p208

핵심체크 행동강령

강령	개념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를 명문화한 집단들의 열망이나 행동방향에 대한 안내의 집합체	
	특징	① 규범성, ② 실천성, ③ 자율성, ④ 포괄성, ⑤ 사전예방에 초점	
	유형	윤리강령	규범성이 강함-「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선서, 공무원헌장 등
		행동강령	윤리강령의 구체화로 규범성과 실천성을 모두 지님-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
		실천강령	행동강령의 구체화로 실천성이 강함-각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행동강령
	OECD 국가	•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 • OECD 국가의 2/3 이상이 공무원의 행위기준을 법률적 형식으로 규정	

우리나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 각 기관에서는 표준강령(「공무원행동강령」)에 기초해 기관의 실정을 반영한 구체적인 강령(실천강령)을 제정·활용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하이패스행정학 p779

오답정리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하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핵심체크 지방채

개념	자치단체가 그 재정상의 필요에서 발행하는 공채로 과세권을 담보로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채무부담행위
특성	• 성격 : 무담보·무보증의 채무(미래의 과세권을 담보로 함) • 목적 : 장기자금 조달 목적 • 대상 : 항구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에 활용 • 용도 : 특정재원(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 • 특징 : 지방재정자립도에 미포함(「지방자치법시행령」은 재정자립도의 자주재원에서 제외함)
법적 근거	• 발행요건 : 단체장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액의 보전,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 발행절차 : 단체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기채승인권 폐지와 예외	• 기채승인권 폐지 : 지방채 발행시 행안부 장관의 승인권 폐지 • 예외 : ①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기능	① 재원조달기능, ② 부담의 공평화 기능, ③ 적자재정보전기능, ④ 자원배분기능, ⑤ 응급적인 재원보전 수단
한계	① 재정수지의 건전성 저해 및 주민부담 가중, ② 차세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부담, ③ 민간채권시장 위축, ④ 국채와 달리 거시경제적 대책기능 미흡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 ②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③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 ④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정답 ② 참여예산제는 참여적 과정을 중시하므로 결과적 측면의 이념이 아닌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 하이패스 행정학 p742

핵심체크 참여예산제도

의의	예산편성과정에 국민(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거버넌스의 제도적 장치, 사전적 참여제도)
배경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가 최초
국민참여 예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 2018부터 시행)
주민참여 예산 (지방재정법 제39조)	① 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의무적 시행)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음 ③ 단체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함 ④ 행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관련제도	• 납세자소송제도 :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 시정할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사후적 참여제도, 「지방자치법」 제17조에 근거,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은 미도입)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답 ③ 영국의 경우 사무배분이 개별적 지정주의에 입각해 있어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이패스 행정학 p798, p849

오답정리

-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주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은 중앙집권을 대변하는 규칙이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신지방분권화와 함께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이 이루어져왔다.

핵심체크 지방정부의 권리

지방정부의 권리와 법칙	딜런의 법칙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로서 주정부의 자유재량에 따라 창조되고 폐지될 수 있다는 법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계층제적 관계로 인식 - 중앙집권)
	쿨리의 법칙	지방정부의 권리를 고유권으로 인식한 법칙(지방분권)
도시헌장 제도	의의	- 주정부가 도시정부의 주요사항을 규정해 준 도시의 헌법으로 미국의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부여방식 - 도시헌장제도에 의하면 도시정부는 주의회가 제정해주는 헌장에 의해 조직된 법인체로서 주정부의 창조물에 불과함(중앙집권)
	홈룰운동	주의회의 도시에 대한 권리 남용으로부터 도시 자신의 자치 발전을 획득하려는 분권화 운동 (주의회의 입법적 통제에 대한 항거 운동 - 지방분권)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163**

핵심체크 민원행정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		
민원인	•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단체 •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제외		
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지방공사·공단, 각급 학교 등을 포함)		
민원의 종류	일반민원	법정민원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나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다수인관련민원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민원처리의 원칙	① 민원사무 지연처리 금지 원칙, ② 민원사무 처리절차 강화 금지 원칙, ③ 민원신청 문서의 원칙(기타민원은 구술, 전화 가능), ④ 복합민원 일괄처리의 원칙, ⑤ 민원1회 방문처리제 등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정답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752

핵심체크 **건전재정과 채무관리**

건전 재정 장치	• 법률안 재정 소요 추계제도(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법 첨부) • 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제한 •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제한 • 세계잉여금 처리용도 제한 • 금전채무에 대한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국회제출 • 국고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시 국회의 사전 동의 • 총사업비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 재정준칙과 통합재정수지의 작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채무 관리	국가채무 (「국가재정법」 제91조)	•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채무 : ①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국가보증채무 중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 •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 : ①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②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③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국가채무관리	기재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국가보증채무 관리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재부장관은 매년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함